'외환銀 매각 진실' 영구미제로 남나

'론스타 역할' 못 밝히면 반쪽 수사

BIS 비율 조작·2003년 MOU체결 등 檢, 탈세·외환도피·비자금 조성만 밝혀

론스타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영장을 법원이 다시 기각하면서 8개월 동안 진행된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은 8일 "수사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번 주 중 금융감독 기관과 매각 자문사 관계자들 2~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던 계획을 다음주로 미뤘다.

◇ '론스타' 추적 봉쇄당한 검찰 =검찰은 그동안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비자금 · 로비 의혹 ▲론스타의 탈세 · 외환도피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네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고 공식 언급한 부분은 탈세와 외환도피 혐의, 비자금 조성밖에 없다.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스티븐 리가 허위 거래, 해외 불법 송금으로 14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국세청 조사로 대부분 밝혀져 처벌만 남았고 본체 수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비자금 의혹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 과정 등에서 업체로부터 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마무리됐다.

본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행장이 구속됐지만 전체 수사 상황으로 보면 의혹 규명의 진도는 더디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고 당시 매각 근거가 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도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론스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론스타 역할 영원히 묻히나= 이강원 전 행장은 2003년 4월 3일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였던 스티븐 리와 MOU를 체결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배타적 협상권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부여했다.

사실상 이 때부터 론스타와 외환은행 경영진,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들의 이상한 딜이 시작됐다.

이 무렵 론스타는 은행법상 단독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재경부는 론스타가 네덜란드계 ABN 암로 은행이나 도쿄 스타 은행과 합작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외환은행 보고만 믿고 딜을 승인했다.

이후 이 전 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무엇엔가 쫓기는 것처럼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서둘러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론스타 자금 20억원이 2003년께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당시 변호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하씨를 불러 로비자금 가능성을 추궁했지만 하씨는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와 관련, 대검이 신청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8일 오후 대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끝내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효숙 인준' 이번엔 통과 될까

與 15일 처리 움직임…민주·민노 찬성 기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한나라당이 국회 인준을 끝내 거부한다면 자유투표를 통한 표결 참여 방향으로 기운데다 열린우리당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면서까지 민노당과의 공조를 굳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저녁 여의도 모 식당에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전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와 관련 우선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에 국회 표결 참여를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끝내 국회 인준에 불참하고 국회의장이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한다면 자유투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 후보자 임명의 절차적 문제점이 해소됐고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에 끝까지 국회 참여를 설득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표결 참여의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적극 나서라는 지역 여론도 민주당을 국회 표결 참여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8일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끝까지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불참한다면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라며 "특히 절차적 문제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고유의 임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도 지난 7일 오후 당초 국회 통과를 적극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상정을 민노당과 함께 무산시켜 가면서 전 후보자 국회 인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제야 어느정도 가지가 쳐진 것 같다"며 "민노당과 민주당의 협력을 통해 오는 15일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국회 표결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민노당이 국회 인준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구되는 전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청와대에서는 오는 12일께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임채정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 표결을 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국회 표결에 참여한다면 이변의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열린우리당의 이탈표가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회피하거나 반대표를 던진다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 처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호남에서 인정 받으려면 과거로부터 결별하려는 노력해야"

원희룡 의원 조선대 특강

한나라당 소장파 대표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8일 "한나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위주의적 권력보다는 과거로부터 결별하려는 자기 노력과 국가의 힘든 현실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호남에서도 진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조선대 치과대 강당에서 정치외교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가진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호남 해방구 발언', '전쟁불사론' 등 논란을 일으킨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기정사실이고 윤리위에서 수위를 심사중인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바뀌었다' 해놓고 특정 상황만 닥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참회와 진실성을 의심받지 말고 처절한 자기변화, 과거와 결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손학규 전 경기지사 오늘부터 2차 민생투어

한나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9일부터 제2차 민생투어에 들어간다.

1차 투어였던 '100일 민심대장정'의 후속탄으로, 이번에는 아예 중고대형버스를 한 대 구입.개조해 전국을 도는 '버스토론방 투어'의 형태를 취했다.

손 전 지사의 한 측근은 8일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청년구직자 및 실업자들과 버스속 토론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두번째 투어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